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연속토론회

2차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번영·행복



일시 |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더불어
민주당

민주연구원

2024 강령정책분과 구성

직 위	구 분	역 할
위원장	위 성 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강령정책분과 운영 총괄
위 원	허 종 식 국회의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강령정책분과 운영
	송 재 봉 국회의원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 기 현 지역위원장 (경북 경산시)	
팀 장	이 용 민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강령개정 기획 및 실무 총괄
팀 원 (민주연구원)	김 은 옥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외교·안보, 통일
	정 상 희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경제 (산업 등)
	강 병 익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복지
	남 국 현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일자리·노동
	류 이 현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성평등, 문화·예술·체육
	박 동 옥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자치분권·균형발전, 과학기술
	박 혁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정치, 언론·미디어
	배 지 영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기후·에너지·환경
	이 경 아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교육
	채 은 동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경제 (국가재정 등)
	박 상 희 정책네트워크실 부장	실무 지원
	김 예 슬 정책연구실 주임	실무 지원

연속토론회 추진계획

○ 1차 토론회 :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 일시 : '24.7.11(木)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춘 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 위 성 곤 강령정책분과위원장
좌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 종 식 강령정책분과위원
발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 성 준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지 병 근 조선대 교수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 성 환 국회의원• 김 영 배 국회의원• 이 연 희 국회의원

○ 2차 토론회 :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번영·행복

- ※ 방점 : 現 강령 각 정책분야에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회像, 삶의 가치와 모양새
- 일시 : '24.7.18(木)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춘 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 위 성 곤 강령정책분과위원장
좌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한 주 민주연구원장
발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 태 응 한빛미디어 의장• 홍 성 국 前 국회의원• 최 유 석 한림대 교수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 지 호 국회의원• 이 강 일 국회의원• 서 미 화 국회의원

강령정책분과 제2차 토론회 :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번영·행복

I 개요

○ 목 적

- 2024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활동의 일환
- 강령 각 정책분야에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회像, 삶의 가치와 모양새 반영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II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패널 및 주요내용 (사회: 이 용 민 강령정책TF 팀장)
인사말	10:30~1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춘 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 위 성 곤 강령정책분과위원장
[좌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한 주 민주연구원장
발 제	10:40~11:25 (각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 태 웅 한빛미디어 의장• 홍 성 국 前 국회의원• 최 유 석 한림대 교수
토 론	11:25~11:50 (각 7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 지 호 국회의원• 이 강 일 국회의원• 서 미 화 국회의원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1:50~12:00	공 동

목 차

발 제

1. 민주당 강령, 무엇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박 태 웅 한빛미디어 의장 1
2. 2024 정책방향 키워드 : 미래·번영·행복
홍 성 국 前 국회의원 17
3. 민주당 강령 개정 : 행복과 삶의 질
최 유 석 한림대 교수 25

토 론

- 차 지 호 국회의원 37
- 이 강 일 국회의원 45
- 서 미 화 국회의원 51

2차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번영·행복

발제 1

민주당 강령, 무엇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연속토론회

강령

헌법 VS 경제개발5개년계획

앞으로 2~4년간 해야 할 일의 목록

- 미국은 강령으로부터 대선 공약을 도출
- 당의 정체성과 가치에 맞춘
- 당대의 과제와 긴밀히 연결된
- 급조하지 않은
- 공약끼리 충돌하지 않는
- 즉시 실행할 수 있는
-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겠다”

미국 민주당의 강령

- 5년 이내에 50만 대의 스쿨버스 전체를 미국산 무공해 대체 차량으로 전환하겠다
- 연방, 주, 지방 정부 차량 300만 대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겠다
- 해안에서 해안까지 최소 50만 개의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고, 5년 내에 800만 개의 태양열 지붕과 커뮤니티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포함해 5억 개의 태양열 패널과 6만 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겠다

미국 민주당의 강령

- 5년 내에 최대 200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저렴한 공공 주택에 에너지 절약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가정의 에너지 요금을 낮추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한다는 대담한 국가목표를 설정해 100% 청정건물부문을 만드는 길로 나아가겠다
- 첫 주택 구매자를 돕기 위해 최대 15,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신설하고, 세금공제를 환급/선지급하겠다

미국 민주당의 강령

- 지역보건소, 농촌보건소 투자를 2배로 늘리고, 이동보건소를 확대하겠다
- 지역개발금융기관 지원금을 2배 확대하겠다
- 산모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산후 메디케이드 혜택을 출산 후 1년까지 확대하겠다
- 사설 교도소와 사설 구치소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지지하며, 교화 프로그램, 상업적 보석금, 전자 감시, 교도소 구내식당, 재입소 및 치료 프로그램에서 영리 행위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강령의 작성 과정

- 공론화
- 충분한 시간
- 각계각층의 참여
-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 지역조직 참여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당원/시민 참여

독일 사민당

- 당 대회: 2년마다 열리는 전국 당 대회에서 주요 정책과 강령을 결정
- 기본 강령 위원회: 장기적인 당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 강령을 작성
- 워킹그룹: 특정 정책 영역별로 워킹그룹을 구성, 세부 정책 개발
- 당원 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반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
- 지역 조직 참여: 16개 주(州) 조직과 지역 지부의 의견을 반영
- 전문가 자문: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자문

스웨덴 사민당

- 당 대회: 4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에서 주요 정책과 강령을 결정
- 프로그램 위원회: 당 지도부가 임명한 위원회가 강령 초안을 작성
- 광범위한 협의: 당원, 노동조합, 시민사회 단체 등과 폭넓은 협의
- 지역 조직 참여: 290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당 조직들이 의견을 제시
- 연구소 활용: 당 산하 연구소인 '시간'(Tiden)을 통해 정책 연구를 수행
-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 LO(스웨덴 노동조합 총연맹)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 정책을 수립
- 지속적인 정책 개발: 선거 사이 기간에도 정책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강령을 업데이트

미국 민주당

- 전국위원회(DNC): 당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
- 강령위원회: 대선 해에 구성되어 강령 초안을 작성
- 전당대회: 4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강령을 최종 승인
- 대선 후보의 영향: 대선 후보의 정책과 비전이 강령에 크게 반영
- 이익집단 참여: 노동조합, 환경단체, 시민권 단체 등 다양한 이익집단이 강령 작성 과정에 참여
- 주(州)별 의견 수렴: 각 주의 민주당 조직에서 의견을 수렴
- 공청회: 강령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온라인 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반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렴

민주당의 강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일반론에 그쳐서는 안된다
- 당의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 대선 공약과 따로 놀아선 안된다
- 그들만의 리그가 돼선 안된다
- 당대의 문제들을 지시해야 한다
-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통해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 함께 꿈꾸고, 함께 실행하는 통로가 돼야 한다

당대의 과제들

- 민주공화정의 완성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 눈떠보니 선진국, 눈떠보니 후진국
패러다임의 변화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과학과 기술
과학기술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이다
- 민간 전문가의 시대
공무원이 가장 똑똑하던 시대는 지났다
- 생태계
생태계 경쟁의 시간이다. 엔비디아, TSMC, 애플, 구글...

지지자를 위하는 정책을 펴서,
지지자를 늘리는 민주당!

상대당 지지층을 더 늘리겠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 캐시백 찬성
- 법인세 인하, 5년 누적 24조4천억 세수 삭감
- 과세표준 3천억 이상 기업에 1조2천억 감면
- 2억이하의 모두 합해 1천8백억에 불과
- 2주택자 전부와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시가 34억) 종과세 폐지

미국 IRA법 (그린 뉴딜법)

- 1) 모든 사회계층과 노동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달성한다.
- 2) 적정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전 미국민에게 번영과 경제적 안전을 보장한다.
- 3) 21세기 도전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사회간접자본과 산업에 투자한다.
- 4) 현 미국민과 후세대를 위해 깨끗한 공기와 물, 기후 및 공동체 회복탄력성, 건강한 음식, 자연에 대한 접근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장한다.
- 5) 최전선 취약계층에 대한 역사적 압제를 중지하고 예방하며 그 피해를 복구함으로써 정의와 공정성을 증진한다.

중산층 재생과 취약층 보호

- 적정임금의 좋은 일자리 창출
건설공을 고용하면 기본환급액의 5배 우대환급 지급
- 취약계층 우대
유색인, 원주민, 이민자, 탈산업 지역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 제조업 부흥을 통한 중산층 재생
전기차제조업,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기 제조, 배터리, 핵심 광물...
- 빈부격차의 확대, 양극화가 트럼프 집권의 자양분이었다면, 좋은
일자리로 중산층을 일으켜 지지기반을 확충하자!
- 러스트벨트를 '탈탄소화' '첨단산업화'함으로써 되돌리자

상대당 지지층을 더 늘리겠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 캐시백 찬성
- 법인세 인하, 5년 누적 24조4천억 세수 삭감
- 과세표준 3천억 이상 기업에 1조2천억 감면
- 2억이하는 모두 합해 1천8백억에 불과
- 2주택자 전부와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시가 34억) 증과세
폐지

국회는 입법부다!

- 법을 만드는 곳, 대한민국 국회
- 법을 만들지 않는 곳, 대한민국 국회

농성 대신에 입법!

- 채수병 해병 사망사건, 특검법 또 거부하면?
- **미 의회의 행정조사권(subpoena power)**
- 1821년 Anderson v. Dunn 연방대법원 판결
- 행정조사권: 법안 제정 및 행정 감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부의 모든 부서와 공직자를 포함, 의회는 이를 통해 법 집행 및 정책 시행을 감독
- 소환장 발부권한: 의회는 소환장을 통해 **관련 인물을 의회 청문회에 출석시키고, 필요한 문서 및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
- 경멸죄 적용: 만약 소환에 불응하거나 의회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의회는 이를 형사범으로 다스릴 수 있으며, Anderson v. Dunn 판결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 보유**

미 의사당 폭동사건 조사 보고서

- 미 하원 1월6일 특별위원회
- 약 1천명을 불러서 조사(interview)
- 약 백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 845페이지의 최종 보고서 발행
- 조사를 거부한 Steve Bannon이나 Peter Navarro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 등은 의회모독죄로 기소, 징역 4개월 형 선고

대장동 수사기록 복사비
1,300만 원을 내는 대신에,

진술 조작하고, 녹취록 조작한다
고 화를 내는 대신에,

증거 공개 의무

- Brady rule
- 검찰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 Napue rule
- 검찰은 증인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
- Giglio rule
- 검찰은 피고인에게 감형/불기소 제안을 했다면, 그 사실도 밝혀야 한다. 이것을 위반한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유죄판결 자체가 무효되고, 기소 자체도 취소

증거 공개 의무

- 증거 배제 :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기소 기각 : 심각한 경우, 기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재심 요청 : 유죄 판결 후 브래디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피고 측은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홍콩, 영국에서는 모든 증거자료를 전자파일로 무료로 입수

조사 전과정 녹화/증거 공개 입법

- 조사 전과정 의무 녹화
- 녹화를 하지 않으면 처벌, 검찰에 불리한 추정 적용
- 재판 기록의 실시간 공개
- 공판이나 구두변론은 MP3, 녹취록으로 공개
- 녹취록은 재판의 양 당사자가 반드시 검토
- 조서 대신 녹음/녹취록 제출 의무화

무능한 국회의원?

- 민주당에 할당된 정책전문위원 44명
부처별로 2.5명의 전문위원 VS KDI, KIEP, KIET...
연 6백조가 넘는 예산 심의, 국정 감시, 입법
- 의정활동의 아마추어화 구조화
- 의석수당 2명씩의 원내 정책전문위원을 갖도록 확대 개편
하면 각 부처를 대상으로 10~20명의 전문위원들이 상시적
으로 모니터링과 정책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차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번영·행복

발제 2

2024 정책방향 키워드 : 미래·번영·행복

홍성국 前 국회의원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연속토론회



I. 전문 - 10년전 프레임 → 미래를 만드는 정당의 이미지

경제는 민주당

대전환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 인구 감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 모든 사회 시스템 전반의 위기
- 한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핵심가치의 재 정의

-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
- 국민통합, 공정, 포용,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성장 혹은 번영의 중요성 강조
-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동시 위기에 대한 인식 포함

비전에 대한 재검토

- 1)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
→ 국민통합, 공정, 포용,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성장 혹은 번영의 중요성 강조
- 2) 내 삶이 행복한 나라 →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
→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성장'을 강조: 성장은 '생존'의 필요충분 조건
- 3) 차별, 불평등, 공정, 평등한 나라 → '불평등'을 포함한 용어 단순화 및 강조
- 4) 생명가치, 감염병 → 삭제 후 '위험 사회'에 선제적 대응
- 5) 한반도 평화 → 세계 평화와 인권 존중, 패권전쟁에 대한 유연한 태도...
- 6) 민생정당 → 미래를 만드는 정당..

<2>

II. 경제 분야(1) - 성장(번영)의 이미지

경제는 민주당

글로벌 패러다임 대전환

- 용어 통일: 대전환? 글로벌 패러다임 대전환? → 모든 사회 시스템 전반의 위기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사회 시스템 전환: 연금,健保, 교육, 노동 등 명시?

포용/혁신 성장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 포용의 근본적 원인: 불평등, 유사 개념: 공정한 시장경제, 사람중심의 일자리, 지속 가능한 성장, 토지의 공공성
- 상대적으로 혁신 성장의 비중이 낮음
- 혁신 성장: 미래, 번영과 연결: 향후 강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
-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의 예측 가능성과 번영(성장)이 중요

번영(혁신성장을 대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10년 후 목표 혹은 슬로건 필요

- 1) 번영의 개념 정리: 동반 성장, 선도국가, 선망 국가
→ 국민통합, 공정, 포용,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성장' 혹은 '번영'의 중요성 강조
- 2) 국가간 경쟁 → 전쟁 수준으로 격상 →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성장의 주체로써 국가의 등장
- 3) R&D, 교육(평생), 디지털 사회 구현 등을 국가의 책무
- 4) 고령자 빈곤에 대한 대안 마련을 추가
- 5) 건전한 국민 재산증식의 장으로 자본시장 육성
- 6) 부동산 문제를 주거권 개념 강화 및 우회 →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

<3>

II. 경제 분야(2) - 성장(번영)의 이미지

경제는 민주당

포용 성장 관련

- 국가 재설계 수준의 대담한 전환으로 필요성 명시 필요
- 소외,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 표명
- 양극화 열위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포함

기타

- 1) 개정 시점의 단기적 상황 비중을 줄여야~~~
- 2) 나열형이 아니라 스토리가 되도록 세심하게 문맥을 다듬어야~~~
경제적 번영 + 함께 행복한 나라(포용) → 국가의 적극적 역할 → 양극화 해소 → 소비/투자 활성화
→ 추가 성장 → 미래 세계의 선도 국가 → 글로벌 위상 격상 → 평화 경제
- 3) 시각 교정: 국민의 입장에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서술 방식 교체

<4>

[참고 1] 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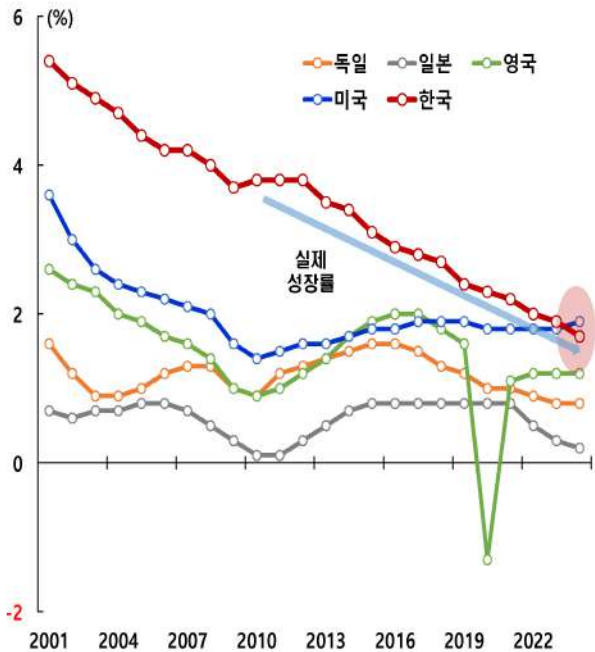
경제는 민주당

주요국(G7) 잠재성장률 추정(OECD)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한국
2001	3.4	2.4	1.6	1.1	0.7	2.6	3.6	5.4
2002	3.0	2.1	1.2	1.0	0.6	2.4	3.0	5.1
2003	2.7	1.9	0.9	1.0	0.7	2.3	2.6	4.9
2004	2.6	1.7	0.9	0.9	0.7	2.0	2.4	4.7
2005	2.6	1.6	1.0	0.7	0.8	1.9	2.3	4.4
2006	2.5	1.5	1.2	0.5	0.8	1.7	2.2	4.2
2007	2.4	1.5	1.3	0.4	0.7	1.6	2.1	4.2
2008	2.2	1.4	1.3	0.4	0.5	1.4	2.0	4.0
2009	1.9	1.1	1.0	0.1	0.3	1.0	1.6	3.7
2010	1.8	0.9	0.9	-0.1	0.1	0.9	1.4	3.8
2011	2.0	0.8	1.2	-0.2	0.1	1.0	1.5	3.8
2012	2.0	0.8	1.3	-0.4	0.3	1.2	1.6	3.8
2013	2.0	0.9	1.4	-0.5	0.5	1.4	1.6	3.5
2014	1.9	0.9	1.5	-0.5	0.7	1.7	1.7	3.4
2015	1.8	1.0	1.6	-0.4	0.8	1.9	1.8	3.1
2016	1.5	1.1	1.6	-0.1	0.8	2.0	1.8	2.9
2017	1.4	1.2	1.5	0.1	0.8	2.0	1.9	2.8
2018	1.4	1.3	1.3	0.3	0.8	1.8	1.9	2.7
2019	1.3	1.4	1.2	0.4	0.8	1.6	1.9	2.4
2020	1.1	1.3	1.0	0.3	0.8	-1.3	1.8	2.3
2021	1.2	1.2	1.0	0.5	0.8	1.1	1.8	2.2
2022	1.5	1.2	0.9	0.7	0.5	1.2	1.8	2.0
2023	1.6	1.1	0.8	0.8	0.3	1.2	1.8	1.9
2024	1.6	1.1	0.8	0.8	0.2	1.2	1.9	1.7

자료: OECD Economic Outlook(23.6월)

한국의 잠재성장률 급락 중...



IMF 2.2%

<5>

[참고 2] 국가의 시장 개입 보편화

경제는 민주당

“선진국, 자국 중심 산업정책으로 회귀”

2019년 11월 27일
경제·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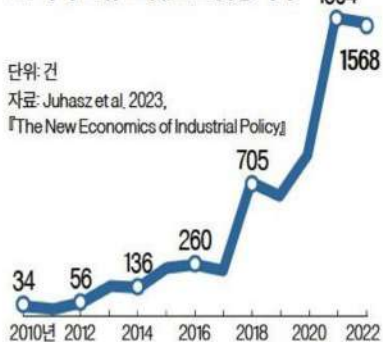
OECD·IMF도 인정



위싱턴 컨센서스의 종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많아져
미국, 칩스법·IRA 등 잇따라 내놓아
EU·중국 등 앞다퉀 산업정책 발표

전 세계 신규 도입된 산업정책 수



자료: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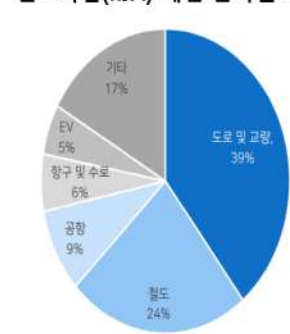
Make it in America 관련 법안

제정 일자	법안	내용
2010-08-11	미국 제조업 강화 법안 (U.S. Manufacturing Enhancement Act)	미국기업이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함
2010-08-10	아웃소싱 제한 (Preventing Outsourcing)	기업이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것을 장려하는 세금 면제 종료
2014-12-16	2013 미국 제조 경쟁력 강화 (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 of 2013)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에 지시하여 관련 기관과 함께 제조업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전
2016-05-20	2016 미국 제조 경쟁력 강화 (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 of 2016)	미국기업이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함

BABA 법안 중 미국산 제품 조건

제품군	조건
철강 제품	제품 원가의 50% 이상이 철강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 내에서 발생된 철강)
건자재	비철금속 및 플라스틱(PVC 등) 중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에서 이뤄져 생산된 제품
공산품	제품 원가의 55% 이상이 미국 생산 제품으로 이루어진 제품

인프라법(IIJA) 예산 분야별 비중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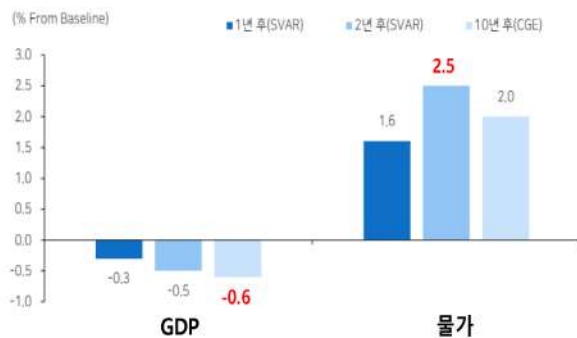
[참고 2] 국가의 시장 개입 보편화

경제는 민주당

對중국 60%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對중국 60% 관세 + 전세계 보편 관세 10%시



자료: Bloomberg Intelligenc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보호주의 확산

미국 정부, 중국산 전기차 등 관세 인상률

품목	현재 관세	인상 관세 (인상 시기)
전기차	25	100 (2024)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	25 (2024)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	7.5	25 (2024)
배터리 부품	7.5	25 (2024)
천연흑연 및 영구자석	0	25 (2026)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0~7.5	25 (2024)
반도체	25	50 (2025)
태양전지	25	50 (2024)
항구크레인	0	25 (2024)
주사기 및 바늘	0	50 (2024)
마스크 및 개인 보호 장비	0~7.5	25 (2024)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25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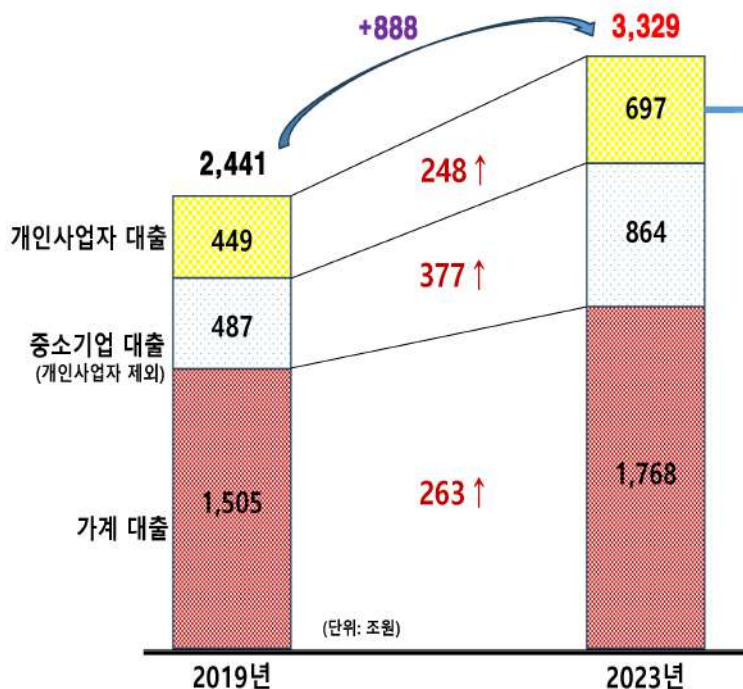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미국 무역대표부

<7>

[참고 3] 내수 경제 구조적 침체

경제는 민주당

사회적 약자에 집중된 부채 → 2금융권 위기 가능성



<자영업자 대출 세부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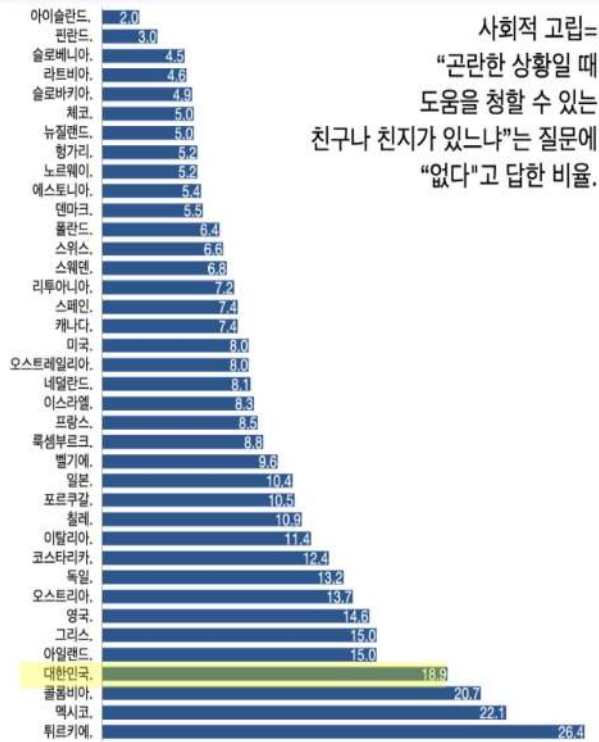
	2019년	2023년
빚있는 자영업자 비중	37%	60%
금리 수준	3.4%	5.2%
1인당 규모	1.2억원	2.0억원
다중채무자	107만명	173만명

자료: 한국은행, KDI 송두한 자문위원 국회발표자료

<8>

[참고 4] 사회적자본 필요성 – 소외와 분노의 일반화

경제는 민주당



<9>

2차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번영·행복

발제 3

민주당 강령 개정 : 행복과 삶의 질

최유석 한림대 교수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연속토론회

03

민주당 강령 개정 : 행복과 삶의 질

최유석 한림대 교수

1. 2022년 강령에 대한 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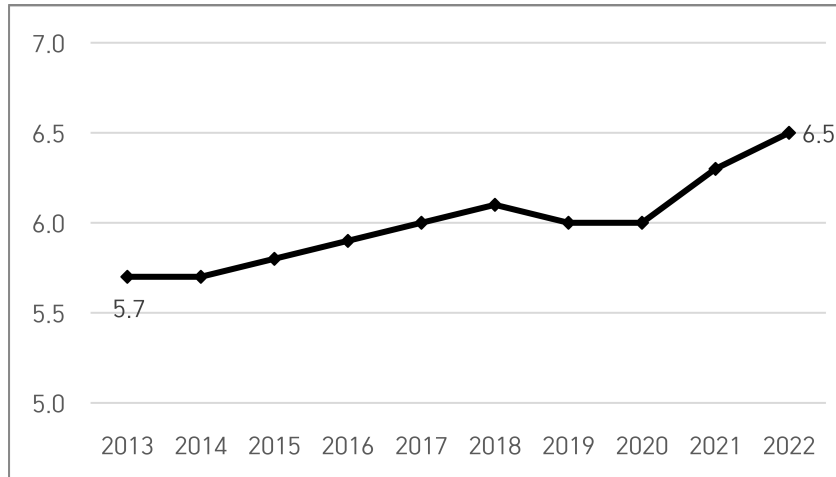
- 2022년 강령에 포함된 공정, 생명 등 5가지 핵심가치, 내 삶이 행복한 나라와 같은 비전은 매우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행복이 얼마나 증진했는지, 핵심 가치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공정’, ‘포용’ 등의 용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음
 - 좀더 쉽게 풀어 쓸 필요가 있음
 - 예) 공정성, 나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상태
- ‘내 삶이 행복한 나라’는 중요한 문제제기임. 한국은 경제력에 비해 국민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행복증진을 위한 핵심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을 증진할 수 있음
 -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이지만 국민 행복감은 낮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 지위재(예: 대기업 정규직, 의대/로스쿨 입학) 획득과 지위하락 방지를 위한 극심한 경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 과도한 경쟁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가? 지대추구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비교과정에서 열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무시, 혐오, 배제의 태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핵심가치와 관련된 영역별 문제해결 중심의 정책(방향) 서술이 나열되면서 다소 건조한 느낌을 줄 수 있음
 - 강령에 있는 영역별 정책방향은 매우 적절하지만 입체적이지 못하고 평면적인 느낌
 - 국민들이 보기에 이러한 정책들이 '나의 행복한 삶'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체감하기 쉽지 않음
 -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삶의 조건에 대한 다차원적인 개선이 필요함
 - 예) 안정된 일자리, 편히 쉴 수 있는 집, 가족/회사에서 존중, 인정받는 느낌
- 대안적인 방법은 사람/집단별 이상적인 모델(청년상(像), 노인상(像))을 제시하고, 이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임
 - 한국의 청년상(도전하고 공감하는 청년), 노인상(여유롭고 포용적인 노인)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 해당 청년상, 노인상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이 방식은 국민들이 쉽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고, 민주당의 정책방향이 무엇을 실현하려고 하는지 좀더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음

2. 한국인의 행복, 삶의 질의 변화

- 한국인의 행복은 최근 10여년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음
 - 2013년 5.7점에서 2022년 6.5점으로 개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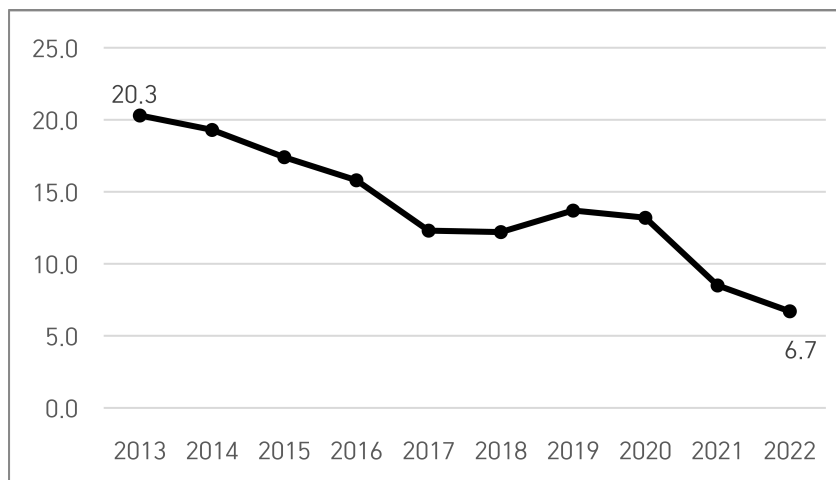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인의 행복(삶의 만족도), 2013-2022, 단위: 점



자료: OECD(2024)

- 행복증진은 행복감이 낮은 집단(5점 미만)의 비율이 감소된 것에서 비롯됨
 - 해당 비율은 2013년 20.3%에서 2022년 6.7%로 큰 폭으로 감소함
 - 행복의 양극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불행한 집단이 감소한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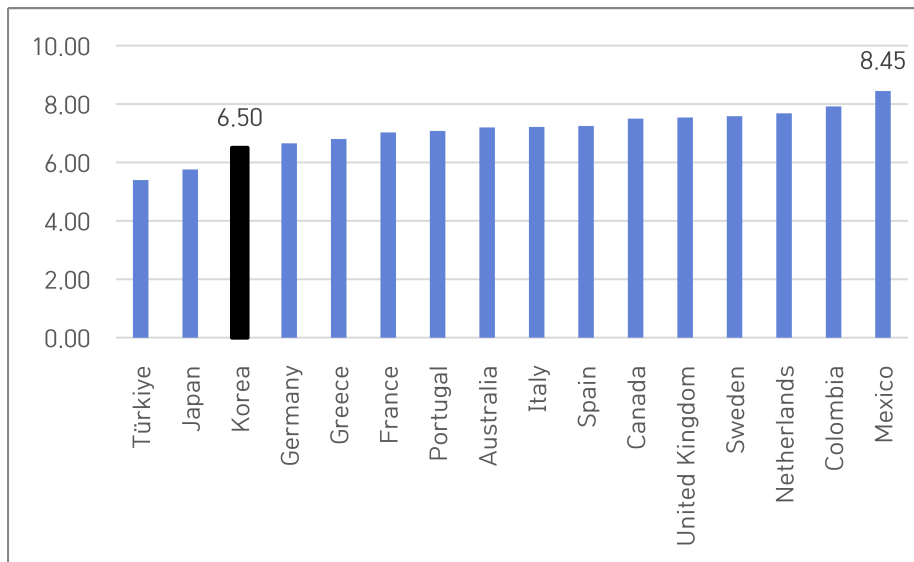
〈그림 2〉 5점미만 낮은 행복집단의 비율, 2013-2022, 단위: %



자료: OECD(2024)

- 행복감 개선 & 불행한 집단 감소는 소득/자산 증가, 복지정책의 확대와 관련이 있음
 - 보편적 복지의 확대(기초연금, 무상보육/급식, 아동수당), 저소득층 복지확대(기초생활 보장 확대, 차상위계층 지원)
 - 생리적, 안전 욕구 충족
- 여전히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감을 보임
 - 인구 1천만 이상 OECD 16개 국가 중에서 튀르키예, 일본 다음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음
 - 행복도가 높은 국가의 특성은 무엇인지, 한국인은 언제 행복한지, 실상에 기반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OECD 국가의 삶의 만족도(인구 1천만 이상 국가), 단위: 점



자료: OECD(2024)

- OECD 국가의 정치경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행복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행복에 긍정적인(+) 요인
 - 투표 참여율(정치적 효능감), GDP대비 사회지출, 고용률
 - 가처분소득(개인/가구), 순자산
 - 쾌적한 주거환경(1인당 방갯수), 교육성취율
 - 안전, 레저시간,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망

○ 행복에 부정적인(-) 요인

- 노동시장 불안정, 장기실업률, 남녀 고용률 격차(성별 불평등/격차)
- 소득불평등, 과도한 근로시간

〈표 1〉 국가별 행복도와 관련된 요인

	한국	핀란드	독일	스웨덴	미국	일본	상관계수	
생활만족도	5.8	7.9	7.3	7.3	7.0	6.1		
투표참여율	77	69	76	87	65	53	0.3553	*
GDP 대비 사회지출	12.2	29.132	25.9	25.5	18.7	22.3	0.3909	*
노동시장 불안정	2.9	2.2	1.4	4.4	4.2	2.7	-0.5641	**
고용률	66	72	77	75	67	77	0.6813	**
장기실업률	0	1.2	1.2	1	0.5	0.8	-0.3455	*
남녀 고용률 격차	18.8	3.1	7.6	3.0	10.5	14.3	-0.7000	**
가구가처분소득	24,590	33,471	38,971	33,730	51,147	28,872	0.7600	**
개인가처분소득	41,960	46,230	53,745	47,020	69,392	38,515	0.7721	**
가구순자산	362,340	230,032	304,317	N/A	684,500	294,735	0.3901	*
소득 불평등(지니계수)	0.339	0.269	0.289	0.280	0.395	0.334	-0.4314	**
1인당 방 수	1.5	1.9	1.8	1.7	2.4	1.9	0.5931	**
교육성취율	89	91	86	84	92	N/A	0.5041	**
혼자 밤길 걸을 때 안전함	82	88	76	79	78	77	0.5307	**
과도한 근로시간	N/A	3.6	3.9	0.9	10.4	N/A	-0.4178	*
레저시간	258.3	330.989	331.2	321.5	285.5	278.3	0.4575	*
건강상태	34	68	66	76	88	37	0.4846	**
사회적 지지망	80	96	90	94	94	89	0.6860	**

자료: OECD(2021) *p<0.05 **p<0.01

○ 2022년 강령은 행복에 부정적인 요인을 줄이고, 긍정적인 요인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된 정책(방향)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음

○ 나의 삶이 행복한 상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 행복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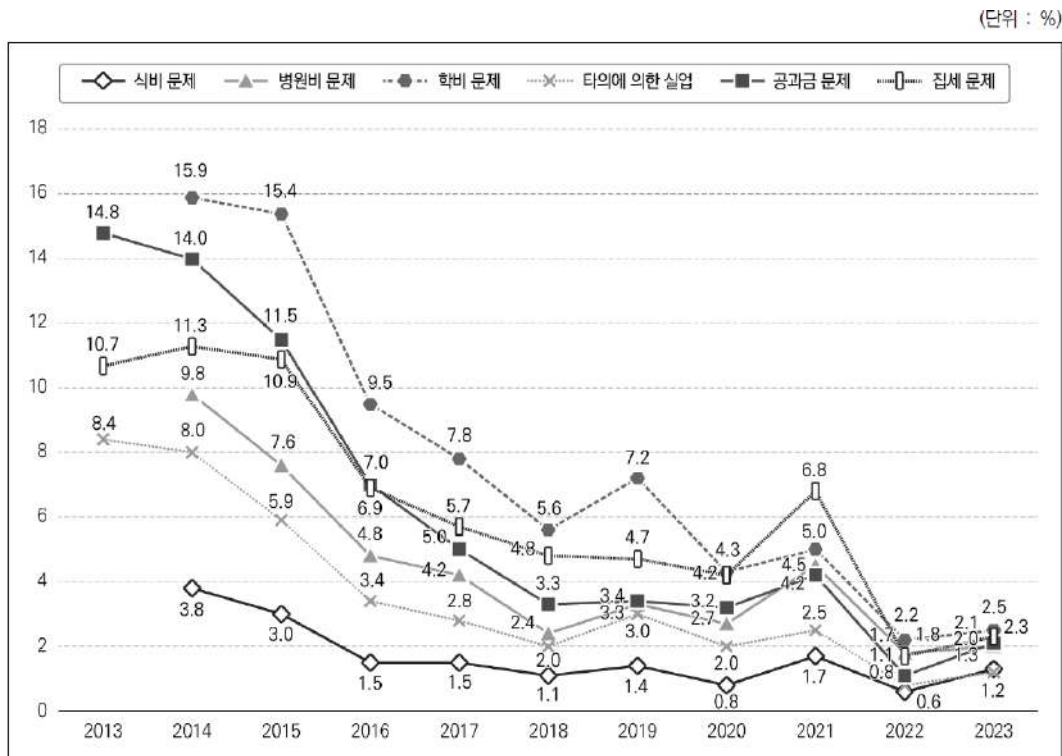
: 개인마다 행복한 상황, 조건, 기대가 상이함

예)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즐거운 이야기 나눌 때

- 자녀가 뛰어난 학업성취를 보일 때
- 자신이 추진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과를 얻고,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 잠시라도 근심걱정없이 평온한 저녁산책을 즐길 때

-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보장수준(소득대체율) 향상
 - 일자리 관계에서 차별/배제 철폐
 - 자신의 능력/성취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정부정책은 그동안 생리적, 안전욕구의 보장에 집중해 왔음. 이제는 인정, 존중,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 국민의식 개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복지정책의 발전을 통해 생리적, 안전욕구는 상당히 충족한 상태
 -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함
- 예) 학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2014년 15.9%에서 2023년 2.5%로 감소

〈그림 4〉 경제적 한계상황 경험 여부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24)

- 6점 중반대의 행복도를 주요 선진국의 7점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행복집단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
 - 일차적으로 중하위층의 행복 증진을 위한 조건 개선(소득/자산, 안정된 일자리, 주거환경)
 - 중상위 행복집단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선(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확대)
- 국민 전체의 행복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중위층 이하 서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동일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투자(예: 기초생활보장)가 보편적 수당(예: 기초연금)에 비해 행복증진에 더 효과적(최유석, 2023)
- 한국사회의 행복수준이 쉽게 증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구조적 요인: 행복감이 낮은 노인가구/1인가구 비중의 증가, 낮은 혼인/출산률로 인한 아동/청년층 인구 감소, 안정된 일자리 감소
 - 기본적 욕구충족의 개선으로는 더 이상 행복수준이 향상되지 못함
- 상위수준의 욕구인 타인에 대한 인정, 존중, 개인의 자아실현은 정체된 상태
 - 인정(공정성 증진), 포용, 존중, 자아실현 욕구 충족은 복지정책 등의 제도를 통해 자동적으로 향상되지 못함
 - 개인, 기업, 공공기관,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3. 행복증진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

- 사회적 지위의 격차 완화: 중위층 강화, 사회이동성 증진
 - 사회적 지위가 소득에 비해 행복에 더 큰 차이를 빚어냄
 - : 사회적 지위는 학력, 소득, 자산, 직업 등을 포괄하기 때문임
 -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함
 - : 타인과의 비교(준거집단 설정)를 통해 자신의 욕망/기대수준을 설정하고 충족도에 따라 만족감/좌절감 경험함
 - 극심한 경쟁, 집합주의 문화, SNS환경에서 타인과 즉각적인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삶과 지위를 평가함(주로 상향평가)
- 한국사회의 지위구조는 소득/자산, 학력, 직업, 거주지역 등이 중첩된 차별적인 구조를 보임
 - 소득/자산, 직업지위 등에서 중하위인 집단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중위층을 확대함으로써 국민행복을 증진할 수 있음
- 계층이동성 증진
 - 계층이동 가능성이 감소하는 양상
 - 부모의 자산/소득이 자녀의 직업선택/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
 - : 청년의 첫직장 선택의 결과는 생애에 걸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침
 - 계층 이동성(상향) 증진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행복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소득 불평등 완화
 - 행복은 상대적 소득의 영향을 받음
 - : 소득불평등이 적은 사회에서는 준거집단과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얻는 집단의 비중이 높음. 소득과 관련된 만족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1차적’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경제정책이 필요함
 - : 소득불평등과 중산층 인식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함(재분배 정책의 한계)
 - 일자리 관계에서 양극화 해소, 원하청 관계를 개선할 필요
 - :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

○ 일자리 관계에서의 안정성, 공정성 증진을 위한 개혁

-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분화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 안정적 직장을 갖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짐
-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노동의 자율권 약화는 행복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근로자의 노동시장 상황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은퇴후 소득(국민연금)에도 상당한 영향을 줌

○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증진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54.6%(남성,73.5%)로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임
-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이유
 - : 결혼, 출산 이후 경력단절, 불안정한 직장에서의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를 갖기 어려움
- 직장문화 개선, 기업의 책임 강화
 - : 일가정균형 유지, 출산/자녀양육 지원 강화
- 남성의 돌봄활동참여 강화
 - : 이른바 ‘독박육아’는 여성이 결혼/출산을 꺼리는 주요 이유
- 양성평등에 기반한 균형있는 돌봄활동 참여
 - :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증가는 자녀출산 의향과 출산력 증진에 긍정적 영향

○ 개인의 존중, 시민적 덕성의 개발

- 변화의 출발점은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 공동체의 복원임
- 정부정책은 시민적 덕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임
- 시민적 가치(예: 배려, 존중, 포용)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포용성, 안정성, 개인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 예) 교육정책의 목표는 개인의 능력개발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 포용하는 심성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임
- 국가의 역할은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임. 이를 통해 시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작용과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음

○ 신뢰사회 만들기

- 행복도가 높은 북유럽 국가의 특성은 신뢰사회임
: 타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책 등 제도적 신뢰수준이 높음
- 한국은 여전히 저신뢰사회
: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156개 국가 중에서 107위(Legatum Institute, 2023)로 평가됨

○ 저신뢰 사회를 어떻게 벗어날까?

- 제도를 설계, 운영, 감독하는 행위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정치권과 사법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
: 특권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음
- 입법, 행정, 사법부에서 주도적 행위자의 윤리의식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가 운영된다는 인식이 제도적 신뢰의 기반임

참고문헌

최유석(2023). 한국의 행복불평등, 법문사.

한국행정연구원(2024).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

OECD(2021, 2024). OECD data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database), and estimates provid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차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번영·행복

토론 1

차지호 국회의원

토론 1

“글로벌 대전환과 다중위기 시대,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에 필요한 미래 강령”

차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갇힌 정당이 아니라, 미래를 대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은 우리 사회에 미래 비전이 사라졌다는 가장 큰 문제의식, 그리고 국민께서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당에 부여해 주신 무거운 책임감을 기초로 준비하였다. 현 정부의 미래정책 실패와 무능함으로 인해 초래된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가 미래의 국가 좌초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해 있는 가장 큰 숙제이다.

목표

이번 강령 개정을 통해 담아내고자 한 중요한 우리 당의 미래 이미지는 첫째, 신문명 사회로 변모해 가는 미래의 큰 물결을 잘 읽어내고 이를 민생을 챙기는 데 활용하는 ‘유능한 미래형’ 정당, 둘째, 글로벌 다중위기 시대에 회복탄력성을 기반으로 ‘미래 위기에 강한’ 글로벌 리더십 정당, 셋째, ‘어떠한 미래에도’ 변함없이 국민 곁에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책임지는 따뜻하고 준비된 정당으로의 의지와 이의 표현이다. 이를 통해 이 강령이 실천될 미래에는 궁극적으로 당원들의 주권 의지 실현과 다음 대선의 정권교체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2024년 강령 개정을 위해 크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곧 맞이할 낯선 ‘미래 사회’를 설계하고, 준비된 글로벌 ‘미래형 리더십’을 좀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신문명 사회의 다중위기 적응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그 속도와 성격 면에서 예전에 겪었던 것과는 다르다. 다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세계는 AI와 에너지 대전환으로 소위 ‘글로벌 신문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여러 위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다중위기’에 적응해 살아남는 것 자체가 국력을 의미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세계는 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변해 간다. 개별 국가와 글로벌 문제가 상호 의존적이고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로 인해 민첩한 국가 정책 및 의사결정, 회복탄력성, 전략적 예측, 불확실성 다루기, 미래 기반 거버넌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이러한 미래를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큰 물결과도 같은 미래에 한 개인이나 일개 조직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리더십과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이것이 국민 삶의 곳곳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미래의 변화무쌍함에 대한 적응, 미래 복합 위기에 대한 적응 기제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분쟁, 재난과 같은 글로벌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국민께서 실감할 정도의 위기 회복력(회복탄력성)이 강한 사회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또 국민 한 명 한 명의 인간 중심 미래 전환을 위해서 미래 정치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분야별 미래 이슈 반영

제1정당이자 수권정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의 4대 비전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이것은 다시 10대 핵심 과제로 세분화되어 22대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현재 우리 당의 강령은 2022년 개정

당시 야당으로의 변화에 맞게 조정되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등의 대전환 시대 기조가 담겨 있다.

이번 강령 개정을 준비하며 유념할 것은, 미래는 단순히 한 분야가 아니며, 주제마다 필요한 주요 미래 의제가 존재하지만,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미래 관점의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미래라는 별도 분야 추가

이어서 기존에 작성된 13개 분야에 미래라는 분야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향후 미래 상임위, 미래 정부 부처, 미래 사법부, 미래 위원회, 미래 연구원 등과 같이 국가 차원의 미래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작동하는 미래 거버넌스의 정당 파트 기초가 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강령을 작성하여 추가한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임박하거나 예정된 미래와 극단적이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담고, 이러한 여러 미래의 공통 의제를 도출하여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핵심 전략이나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14. 미래

미래 거버넌스 체계 확립

미래 사회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중위기 시대에 국가 신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차원의 미래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미래 상임위, 미래 정부 부처, 미래 사법부, 미래 위원회, 미래 연구원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한다.

미래 기본사회 토대 마련

미래 사회로의 변화가 국민 모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기본소득 도입과 실행 체계 마련, 스마트 복지 시스템 구축,

고령화 사회 대비 정책을 통해 어느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 기술과 활용 지원

미래 첨단 기술과 이를 통한 혁신은 미래 사회 변화의 주요 동인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생명공학 등 주요 첨단 기술이 경제의 신성장을 주도하고,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민생과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불확실한 미래 대비

임박하거나 예정된 미래뿐만 아니라 극단적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한다. 열린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예측을 상시화해 미래 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근거를 기반으로 낮은 확률의 고위험 이벤트(X-이벤트)에도 대응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한다.

다양한 미래 사회의 공통 의제 도출

이상의 다양한 미래상에 공통된 미래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전략과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미래 사회의 주요 과제와 목표를 연결시키고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하여 국민과 함께 자신있는 미래를 맞는다.

이상과 같이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된 전략과 글로벌 리더십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연결시킨다. '신문명 다중위기 시대'에도 변함없는 미래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 행복, 미래세대의 희망을 지속시키는 기초 인프라로 기능하는 제1의 미래 정당, 미래를 읽을 줄 아는 희망의 수권정당이 된다.

결론

“미래는 바로 지금이며(The future is now), 내일의 도전과 기회는 오늘의 선택에 달렸다.”

- 앤 메틀러, 유럽 ESPAS 의장 (2019년 ESPAS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

앞으로 우리가 국민과 함께 맞이하고 준비할 미래는 AI와 에너지 대전환의 신문명 사회, 그리고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글로벌 다중위기 사회이다. 이러한 미래상을 바탕으로 즉 ‘기본사회’를 중심으로 준비된 리더십을 발휘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선봉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의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미래지향적 내용을 강령에 반영하는 것은 이러한 소명의 실천이며, 글로벌 대전환과 다중위기 시대에 대비한 포용적인 진보 정당을 실현하는 기초이다. 강령 각 분야에 담긴 미래 주요 키워드와 방향성은 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2030년을 예측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각종 분쟁, 재난, 위기가 일상인 시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으로 미래 위기 대응력(회복탄력성)을 갖추어 지속 가능한 미래,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앞장서 준비한다면 위기 속 미래의 기회는 지금, 우리 앞에 있다.

2차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번영·행복

토론 2

이강일 국회의원

토론 2

“강령 키워드 : 미래·사람·내삶”

이강일 국회의원

1. 서론

현대문명은 가속문명입니다. 너무 빠른 속도에 국민은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을 돌보며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 무한 이윤추구의 경제속성은 기업과 개인에게 과도한 경쟁을 강요합니다.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는 분위기로 노동자는 가족의 시간, 문화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 사회분야의 가속화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의 건강을 해칩니다. 빠른 생활속도와 기술발달로 대면접촉이 줄고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약화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 기술분야의 가속화는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었지만 통제되지 않는 기술권력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심각한 디지털 중독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과 집중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 경제개발의 가속화는 자연과 생태계를 복구 불가능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산업화와 자원소비로 인한 기후재앙으로 폭염, 폭우, 가뭄이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 문화분야의 가속화로 문화활동과 여가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 가족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감은 약화 되고 소통이 줄어들어 가족 전반의 건강과 행복이 위협받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가속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정책은 노동시간을 주 62시간으로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간의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속도에 떠밀려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속도에 희생된 것들을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이 감속문명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 본론

2024년 민주당 정강에 국민에게 시간을 되돌려주는 ‘시간’이란 키워드를 새롭게 넣을 것을 제안합니다.

(1) 시간을 정치용어로 재정립

철학적 경제적 용어인 시간을 정치적 용어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상품생산의 요소로만 한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정치적으로 시간 회복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가치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 위의 전환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체계 재정립

무한경쟁의 경제논리로 사회 전 분야를 획일화시킨 현대문명의 체계를 시간회복의 정치논리로 전 분야를 점검하고 전환하여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체계를 재건해야 합니다.

(3) 회복의 시간

- 존엄의 회복

시간이 없으면 나를 존중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를 존중할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있어야 인간이 존엄해 집니다.

- 노동의 회복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환원되면 노동과 시간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무한 경쟁과 오직 성공 앞에 여성들은 아이들을 사람답게 키울 자신이 없어 출산을 거부합니다. 노동시간의 회복을 통해 여가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돌봄의 회복

지구, 다른 생명, 가족과 이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타자를 돌보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년 13,000

명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사이에 매년 약 25,000~50,000 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4) 시간회복 정책 (예)

주 4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 유연근무제 확대, 가족과 여가 시간 보장제 육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 확대, 공공 휴양시설 문화시설 강화, 기본 생활권 제정, 학원수업 제한권, 디지털 디톡스 프로젝트, 상조 휴가법 등.

3. 결론

국민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일에 민주당이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시간을 도둑질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밀어 붙이는 의심스러운 주체들을 견제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가족의 시간, 문화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이 사람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고 국민은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다음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강령으로 채택하여 이 가치가 정책 전 분야에 반영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2차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번영·행복

토론 3

서미화 국회의원

토론 3

서미화 국회의원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연속토론회

2차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번영·행복